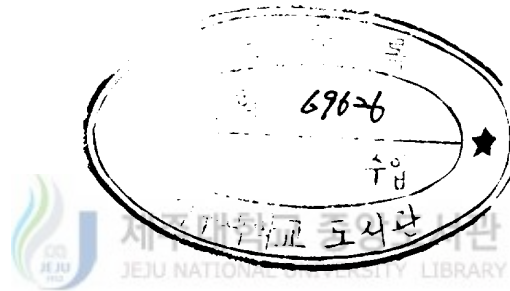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民族統一에 관한 研究

— 統一教育의 새 方向摸索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朴 銓 村

1992年 8月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民族統一에 관한 研究

— 統一教育의 새 方向摸索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朴 銓 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朴銓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康 根 亨 

審査委員 梁 邦 柱 

審査委員 高 性 俊 

(초록)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민족통일에 관한 연구

— 통일교육의 새 방향모색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고 성 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박 전 촌

이제 20세기도 8년이면 끝나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가 펼쳐질 것이다. 돌이켜 보면 20세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흐름의 하나는 공산주의의 등장과 팽창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9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공산주의는 그 체제가 안고 있는 비민주적 요소와 경제침체로 인해 북한만을 제외하고 붕괴되어 가고 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1985년 이래 전개되어온 페레스트로이카는 1990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포기를 선언케 했고, 급기야는 1991년에 체제가 붕괴되고 말았다.

소련에서의 개혁바람은 동구공산권에 파급되어 1989년 이래 모든 동구국가들이 탈공산화의 길을 가고 있다. 중국 역시 '78년이래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다 천안문사태가 야기됐으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 추세에 영향을 받고서 북한도 서서히 개혁과 변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극적인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통일전망을 한층 가깝게 느끼게 해 주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의 느꼈던 감격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통일후의 휴유증과 통일비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통일독일의 현실은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최근 동향 등은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통일정책을 재조명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민족적 통일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도 그 목표와 내용,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통일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서독이 통일을 대비하여 실행해 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이 독일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상기해 볼 때 전향적인 민족통일 교육의 모색은 통일에 초석이 될 것이다.



目 次

I. 緒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範圍 및 方法	2
II. 社會主義圈의 變化	5
1. 體制變化의 背景	7
2. 體制變化의 內容	9
3. 體制變化의 類型과 展望	12
III. 北韓體制的 變化樣相과 그 展望	18
1. 主體思想의 再構成	21
2. 政治的 部門	26
3. 經濟部門	29
4. 社會部門	31
IV. 獨逸統一의 過程과 現實	32
1. 하나의 獨逸을 위한 東西獨의 努力	33
2. 統一獨逸의 現實	37
3. 獨逸統一의 敎訓	40
V. 바람직한 統一敎育의 摸索	43
1. 現在까지의 우리의 統一敎育	46
2. 轉向的 統一敎育을 위하여	48
VI. 結 論	53
參 考 文 獻	57
Summary	65

I. 서 론

1. 연구목적

고르바췌프의 개혁·개방정책을 시발점으로 하여 사회주의권은 체제개혁이 시작되어 밑으로부터의 민중혁명을 경험하고 현재는 탈사회주의, 자본주의로의 길을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었고, 1991년에는 개혁의 선구자였던 소련에서 소비에트연합이 해체되어 독립국가연합이라는 민족중심의 정치체제를 결과했고, 동구 공산당은 현재 지배력을 상실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가 도입되는 등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틀을 잡아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다원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면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되었던 냉전체제의 한축이 붕괴되고, 새로운 다원적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20세기에 시작된 공산주의체제가 자체모순에 의해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데서 자기 변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시대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로써 현재의 세계사는 개방화, 다변화, 국제화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이 역사의 대세라면 북한 또한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동구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주의 체제 고수의 방과제임을 선언했던 북한도 시대의 전환점에 서서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자기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1991년 북한은 남한과 동시에 유엔가입을 했고, 12월에는 '남북 기본관계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

언'에 합의 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부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은 북한이 예전처럼 고립적이어서는 북한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도전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국제질서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권의 변화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통일교육에 일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교육은 다분히 체로-섬적인 게임구조에 토대를 둔 냉전적 사고방식에 의한 북한에 대한 주입식 교육과 일방적 홍보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반공, 반복한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교육이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교육방법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통일교육 속에는 이데올로기 교육이 포함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일을 향한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서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고 교육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폐쇄주의적인 반공교육보다는 자율적이며 개방적인 통일의식을 국민들이 갖게 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과제인 것이다. 또한 탈냉전시대로 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한 경제전쟁의 양상과 통일의 휴유증과 통일비용의 큰 부담을 안고 있는 통일독일의 현실은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시각과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우리의 통일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비단 최근에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대체로 소련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서

부터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

동구의 변화는 소련의 후원하에 강행되는 공산당의 공산화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경제난이라는 두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체제내적 개혁을 실시하면서 부터다. 중국은 모택동사망후 78년 덩소평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4대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변혁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8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시나트라독트린 이후 동구의 탈공산화, 독일의 통일, 그리고 소련체제의 와해 등이 이를 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그 시점을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80년대 중반이후 특히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추진되면서 전개된 현상에 국한을 시키고자 한다.¹⁾

민족통일의 문제도 분단 47년이 지나면서 그 환경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지금의 내외정세는 분단당시와 판이하게 다른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공식접촉이 시작된 1970년대초 당시와도 크게 다르다.

특히 89년부터 전개되는 사회주의권의 지각변동과 독일통일 등의 외적 여건과 인구구성비의 변화와 정치사회체제의 고착화, 남북한 발전 수준의 격차 등 내적여건의 변화는 통일의 목표와 통일의 접근방법에 있어 대전환을 요구한다 하겠다. 통일은 단순한 국가통합이 아니다. 오히려 통일은 우리 민족사회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즉 민족사회 성원의 삶의 터전을 하나로 하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분단과 국가통합의 양분법적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1) 50년대 이후 60년대의 공산권의 변화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Charlmers Johnson ed, (1970), 『Changes in Communist System』, (Standford : Standford University Press)
스테판 화이트·다니엘 벨슨 저, 도성달·이명남 역, (1990) 『비교공산주의 정치론』, 인간사랑.

넘에서 벗어나 통일을 '민족통일'로 인식하며 민족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터전을 합쳐 가는 전과정으로 인식하고자 한다.²⁾

이 글의 구성은 우선 제2장에서 사회주의체제변화의 현황은 어떠한고, 변화의 요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가를 다루고, 3장에서는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북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고, 4장에서 독일통일과정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현시대사의 흐름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어떠한 길로 가야하는지를 서독의 통일을 위한 교육적 노력에 주목하면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에 의하였으며 역사적 접근법과 규범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2)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문제인식의 재조정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이상우, (1990), "통일정책의 재조정문제-이기는 통일에서 함께사는 통일로", 21세기위원회, 「민족화합의 방향 모색」, (제주에서 개최된 제2차 종합세미나 <1990년 8월 7일> 주제발표논문), pp. 3~29.

II. 사회주의권의 변화

영국을 시작으로 전유럽으로 확산된 산업혁명의 결과, 이제까지 정치의 객체였던 노동자 세력의 급부상은 기존의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끔 되었다. 이러한 조류에서 당시 유럽의 선진국이었던 러시아의 전반적인 상황 중에서 다른 유럽국가들과 뚜렷한 차이점은 전체적인 군주의 존재로 인한 사회의 경직은 러시아인민들 마음속에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 결과 원시시대부터 부분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그 이전의 사상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개념은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혁명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념은 러시아에서 적용된 후 그 영향력을 확산시켜, 제2차 대전이후에는 동유럽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몽고, 월맹 등의 아시아와 쿠바 등 제3세계 국가에까지 세력을 미쳤다. 따라서, 냉전의 절정기였던 1950~60년대의 지도를 보면, 단순히 2분법적으로 빨강색(Red, 사회주의진영)과 대비되는 밝은색(자본주의진영)으로 단순하게 표시되어 있었다.³⁾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데탕트(Detente) 시대가 도래하고, 잠시동안 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침공으로 신냉전(New Cold War)의 시기가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 소련의 고르바췌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ev)의 가치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정책과 글라스노스트(Glasnost) 정책으로 동유럽에 대한 시나트라 독트린선언을 시발로, 그 이념이 기운을 잃기 시작하였다.⁴⁾ 사상의 변화는 수십년에 걸쳐서 점증적으로 발전된다고 한다면 북한, 중국,

3) Robert D. Warth, (1954), 『The Allies and the Russian Revolution』, (Durtham, N.C : Duke Univ. Press), pp. 30~44.

4) Richard Sakwa, (1990), 『Gorbachev and His Reforms, 1985~1990』, (New York : Prentice Hall), pp. 310~349.

쿠바 등을 제외한 사회주의진영의 붕괴과정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하겠다.

동구에서 탈공산주의의 흐름은 1989년 폴란드에서 공산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동유럽 최초로 비공산당원이 정부수반이 되면서이다. 이어 헝가리 공산당이 스스로 당독재를 해체하고 다당제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체제를 부활시키는 개혁을 실시했고, 이것은 동독으로 비화되어 베를린 장벽은 허물어지고 서독과의 통일을 이루는 대변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혁은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으로 계속되었다.⁵⁾ 또한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도 정치에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경제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다소 다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한 또한 변화의 징후를 스스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대변혁을 야기시킨 소련은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기로 한 개혁안을 최고연방회의에서 채택하였고, 1991년 보수파에 의한 불발 쿠데타 이후 개혁의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실각하였고, 자유주의적 개혁주의자인 엘친이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급속한 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하였다. 그후 과거 1922년부터 유지되어왔던 소비에트연방체제가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으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구와 소련의 변혁은 20세기에 시작된 공산주의 체제가 그 마지막 연대에서 진정한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뜻한다.⁶⁾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의 결합으로 공산주의 사회라는 이상을 실현시키겠다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의 대실험이 실패했음을 현재의 동구와 소련의 변혁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5) Berthold Meyer, (1989), "Common Security Versus Western Security Cooperation?: The Debate on European Securit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Lemaitre et al. 「European Oplyphony : Perspective beyond East-West Confrontation」, (London : The Macmillan Press, Ltd.), pp.169~175.

6) Zbigniew Brzezinski, (1989), 「대실패 : 20세기 공산주의의 출현과 종말」, 명순회(역), (서울 : 을유문화사) 참조

1. 체제변화의 배경

그동안, 공산권은 소련이라는 종주국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일체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85년 고르바췌프 등장으로 사회주의권은 변혁의 다양성을 보이면서 이제는 각 국가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시각과 입장이 다양해졌다.⁷⁾

스탈린시대 이후 소련의 국가사회주의의 역사는 사회주의 사상의 교조주의적 왜곡과 현실사회주의의 관료주의적 왜곡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은 초기에는 ‘스탈린주의’의 청산에서 비롯되었다.⁸⁾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경제체제의 전개는 소련과 동구경제를 낮은 생산력과 근로의욕의 저하, 성장률의 둔화, 생필품의 결여 등으로 요약되어지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했다. 러시아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소련이 택한 경제관리 운영방식은 사회주의경제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관료적이고 정치적인 지시와 명령체제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자체적 반성이 체제변화의 첫째의 배경요인이라 할 것이다. 토지를 위시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입각한 중공업위주 정책의 추진은 잉여자본과 노동력을 동원하는 형태의 외연적 결합을 통한 생산과정의 지속적인 혁신과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요청되는 내면적 성장단계에 와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중공업 위주의 정책의 추진은 의식주문제와 관련된 경공업의 낙후를 야기시켰던 것이다.⁹⁾

체제변화의 둘째의 요인으로서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독재체제의 비효율성이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전위로서의 당이 관료주의적인 상급지령자로 전락하여 프롤레타리

7) Alvin Z. Rubinstein, (1991), "Soviet Client-States: From Empire to Commonwealth?", 『ORBIS』, Vol. 35, No. 1, Winter 1991, pp. 69~78.

8) 김항원, (1990), 「소련사회의 변화양상」,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발표회(1990. 9. 6) 발표요지, 16면 참조.

9) 조희연, (1991), "소련 동유럽 사태와 남한의 이념논쟁", 『사회평론』 1991년 11월, 163~164면 참조.

아독재가 당독재로, 당독재가 관료독재로, 다시 그것은 일인독재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실패는 대중의 창의성을 억압하였고 대중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켰으며 그 결과는 생산력의 정체로 귀결되었던 것이다.¹⁰⁾ 즉 절대적·비오류적인 위치에 있던 당은 토론과 비판의 자유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탈린체제의 관료주의는 사회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결국 사회주의 체제는 정체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세제, 공산화 과정에서 동구의 경우는 마르크스-레닌이즘에 입각한 스탈린체제의 소비에트형 공산주의 정치문화가 동구의 전통적 정치문화의 특성인¹¹⁾ 국가의 우월성과 사회의 위약성, 그리고 메시아니즘이 도움으로 폭넓게 이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후의 공산주의 정치문화에 대한 전전의 전통적 정치문화의 이반으로 나타난 것이 그간에 시도되어왔던 체제변혁운동이었고, 이에 민족주의, 다원주의, 종교적 특성, 동구 고유의 사회문화요인 등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권 붕괴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몇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변화과정에서의 평화성이다.¹²⁾ 즉 국가가 밑으로부터의 변혁에 대항할 만한 대항폭력이 부재하였음은 시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것으로 체코를 제외한 나라들에서의 민중운동은 비폭력적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새롭게 정당성의 원천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국가의 물리적 폭력이 정당성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은 아래(사회)로부터의 변혁과 밖으로부터(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결합하여 초래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변혁과정에

10) Stephen White, (1991), "Rethinking the CPSU", 『Soviet Studies』, Vol.43, No.3, 1991, pp.405~424.

11) Abel Aganbegyan, (1989), 『Inside the Perestroika : The Future of the Soviet Economy』, (N.Y. : Harper and Publishers), pp.165~167.

12) Rita Dileo, (1991), "The Soviet Union 1985~1990 : After Communist Rule the Deluge", 『Soviet Studies』, Vol.43, No.3, pp.441~448.

서 위로부터의 대응은 거의 무력하였고¹³⁾, 오히려 이것 때문에 1970년대 후반부터 동구의 각 나라에서 서서히 형성된 자율적인 사회가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공산 정권의 대안적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둘째로 새로운 민족주의 정향이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소련, 유고 등의 다민족 연방국가¹⁴⁾에서 급격한 정치질서의 해체는 민족 자치권의 요구로 번져갔고 결국은 이들 국가에서의 민족분규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민족단위로 정치체가 분리되었고 현재는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정치체가 등장하였다. 세째 이들 사회주의권의 민중혁명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비교 혁명의 특징이 있다. 자신들이 유지해왔던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을 경험하였고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 혁명을 수행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¹⁵⁾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서의 체제변화는 뚜렷한 대안의 제시가 없다. 즉 서구식의 의회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로 나아가면 서구와 같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한 체제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 체제변화의 내용

1) 경제개혁 : 시장경제도입과 사유재산제의 확대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특징이며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은 사적소유에 있다고 한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적소유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하며 결국 자본주의는 내적 모순에 의하여 공유재산제를 실시하는 사회주의로 필연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공산주의국가는 국유화와 집단화

13) A. Brown, (1990), "Gorbachev and the Reform of the Soviet System", 『Political Quarterly』, Vol. 58, No. 2, April-June, pp. 139~151.

14) W. D. Conner, (1988), 『Socialism's Dilemmas: State and Society in the Soviet Block』, (N. Y. : Columbia Univ. Press).

15) K. Dawisha, (1990), 『Eastern Europe, Gorbachev and Reform: The Great Challenge』, 2nd ed.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pp. 54~57.

를 명분으로 당핵심관료에 의한 또다른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평등을 실천한 사회는 아니었으며, 그 실현 또한 불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경제개혁은 우선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와 국가관리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중앙집권적 계획·명령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비능률적인 경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논의의 주요대상이 되어왔고, 그 논의는 대체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개별경제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 고양 및 국제경제 관계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이 시장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장경제가 계획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시장-계획’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오늘날 이들 나라에서는 처음의 기존 경제체제를 정비하고 계획에 시장을 접목한 혼합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개혁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그런 요법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가 처한 경제침체를 타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군수산업 중심의 중공업에서 소비재 생산중심으로 전환을 가져오고 있으며 화폐경제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기에 자금자족체제를 포기하고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¹⁶⁾

2) 정치개혁 : 다원주의의 수용

사회주의권에서 경쟁적 정당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공산당 일당권력독점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치적 자유와 평등 원리에 입각한 국민의 주권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민은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 정당, 정책, 이념

16) Leonid Korenev, (1990), 『The Soviet Economy』 (Moscow : Novosti Press Agency), pp.25~26.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절대주의하의 공산당 일당지배와 계급독재를 포기하고 다원주의에 입각 다당제의 수용을 가져왔다.¹⁷⁾ 특히 복수후보제,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보장, 투표절차의 형식주의 배제 등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실시하여 인민의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소련에서 급진개혁주의자인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으며, 동유럽에서 자유선거가 이루어져 의회민주주의의 새길들이 열리게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정치체제가 다원주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독재를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엘리트 집단의 출현이 시급하며 동시에 대안적인 제도의 창출이 필수적이다.

3) 사회개혁 :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성화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다양한 각종의 이익집단이 생성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독립노조, 민족집단, 대학, 교회, 언론 등의 분야가 제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산당정권의 상하단체나 비밀기관들이 스스로 해체되거나 민주화과정에서 비리가 폭로되고 있다.

사회개혁은 모든 면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사회를 민주화하는 즉 글라스노스트(공개성·개방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발달과 국가의 시민사회에의 종속을 추구한다. 요컨대 이념에 있어서 획일주의를 지양하고 사상의 개방,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정보의 전면적공개, 언론의 민주화와 공개주의, 문화해방과 예술의 르네상스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주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체제변화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7) 고르바초프저, 하용출 옮김, (1988),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사계절출판사), 63면.

〈표 1〉 공산주의권 국가의 개혁방안과 그 내용

대 내 적 외 적 선 전	은 폐 된 내 용	개 혁 방 향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독재 민주집중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일국사회주의 당우월주의 소비에트제도 노동자 천국 평등한 사회 사회주의 우월성 집단화, 국유화 국영농장, 집단농장	공산당일당독재 관료주의화 (Nomenclatura 특권층) 군사대국주의-당의대군 엘리트층원의 비경쟁성 (기회균등 배제) 비경선제도 비밀정보기관, 경찰기관의 통제 언론의 획일적 선전 선동 인민대중의 궁핍화 생필품의 결핍과 품귀 현대판 노예제	다당제도도입 경선제도도입 자유총선도입 공산당권력 독점폐기 경쟁적 시장경제도입 사유재산제 도입 언론자유화 당·행정분리 (대통령제 도입) 비밀정보, 경찰기관 폐쇄 인간적 사회주의 강조 사회민주주의 수용 M-L-S 포기

3. 체제변화의 유형과 전망

1) 체제변혁의 유형

소련공산주의의 몰락은 ①미-소관계의 변화, ②동구권의 변화, ③제3세계와의 관계변화, ④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와해 등을 초래했고, 사회주의권 국가는 소련과는 무관하게 저마다 자국의 민주개혁과 정치 경제개혁을 다양하게 독자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 동안 공산권은 소련이라는 종주국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일체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85년 고르바췌프 등장으로 사회주의권은 변혁의 다양성을 보이면서, 이제는 각국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시각과 입장이 다양해졌다.

사회주의의 체제변화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치적 다원주의 도입을 기준으로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4개의 모델로 구별할 수 있다.

〈표 2〉 사회주의권 변혁의 다양한 모델

개혁 유형	사회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화	사회주의적 다원주의 (개혁사회주의)			보혁갈등	사회주의 우월성 강조		
		자유총선 실시	자유총선 실시	자유총선 실시		다당제 경선제 민족분규 연방제	4개노선 견지 4대현대화	미개혁 미개방
개 혁 내 용	자유총선 실시	자유총선 실시	자유총선 실시	자유총선 실시	다당제 경선제 민족분규 연방제	4개노선 견지 4대현대화	미개혁 미개방	미개혁 미개방 주체사상
	다당제, 자유화, 민주화	다당제 비공산 정권	다당제 공산정권 연정	다당제 공산정권 연정				
국 가	구동독	불가리아	알바니아	몽골	소련*	중국	베트남	북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유고*	라오스 쿠바		
	(발트3국)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유고)	캄보디아	신사회주의 동맹구상		

* 소련과 유고는 각 공화국별로 민주화과정이 다르며 민족분규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방자체의 성격으로 파악하였음. 자료: Global Assessment, No.10 (Annual Forecast) 1991: The Americana Annual 1991 참조

여기에 기초하여 체제변혁의 유형을 좀 더 단순화시켜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면 우선 첫번째의 유형은 탈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소련과 동유럽의 국가군이다.¹⁸⁾ 동독은 서독에 흡수통합되었고, 다른 동유럽국가에서는 집권당이었던 공산당이 소수당(대부분 사회당으로 개칭)으로 전락하고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소련은 공산당이

18) 이에 관한 분석은 최노석, (1990), 「미완의 혁명-동구 페레스트로이카의 현주소」 (서울: 모음사), 127~206면 참조.

불법화되고, 과감한 정치, 경제적 개혁정책을 시행하였다.

둘째로는 정치에서는 공산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만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경제개혁에만 치중하고 정치개혁은 유보한 채 천안문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억압적인 국가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정치개혁이 잘못되어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여 정치의 통제권을 놓치게 되면 나머지 둘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제한된 개혁’, ‘선택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¹⁹⁾

세번째 유형으로 북한과 쿠바를 들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경제에 있어 사회주의 본질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채 부분적인 대외개방만을 실시하며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 체제유형의 전망

이렇듯 사회주의권내에서의 변화유형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保革葛藤 : 소련의 갈등

첫째 소련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초기 페레스트로이카의 기본정신이었던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사회주의의 강화는 지금은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보아진다.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경제욕구를 상승시켰고, 이것을 소련의 생산력이 포용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경제욕구에 대한 생산력의 수용불능이 소련을 탈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된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소련에서는 현재 경제위기 및 민족분규 뿐만 아니라 군대 및 핵무기의 관할권 문제, 영토문제, 독립국가간 경제갈등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에 미국을 위시한

19) 김동성, (1989), “중국의 실용주의 개혁과 한계”, 『외교』, 제11호, 105~112면.

서방국가들은 1992년 1월 22일 1947년의 마살플랜 이후 최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 구호활동인 '독립국가연합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식량, 의약품, 주거, 에너지 및 기술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인 엘친은 원조의 공평분배, 구 소련의 부채상환, 대미 미사일 목표변경, 전술핵의 완전 폐기 등을 제시함으로써 서방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방국들간에 지원방법, 분담액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구 소련내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처한 위기의 해결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구 소련내에서는 물자부족과 가격폭등에 따른 대중적 불만의 표출, 야당 및 반정부세력의 반발, 각 공화국 내부의 정치적 대립의 고조, 패권적 러시아 대국주의에 맞선 우크라이나 등과의 경제적 마찰과 독립국가연합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군사적 갈등의 심화, 각 공화국 내부의 소수민족들의 잇따른 독립선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주의의 문제는 탈이데올로기 시대가 대면하게 될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이며 특히 탈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 기존이념의 붕괴를 대신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영향력은 당분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²⁰⁾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다원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독립국가연합의 장래는 아직은 유동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소련 내부의 정치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발휘되어 공화국간의 분열을 어느 정도 해결하느냐가 구 소련의 미래에 관건이 된다 하겠다.

(2) 社會主義 우월성 강조 : 중국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모택동의 사망과 문화혁명 4인방의 몰락이후 그야말로 역사적인 노선전환을 하였다. 특히,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3中全大會에서 4대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당과 국가의 최고 최대의 과제라고 선언한 후

20) 프란시스 후쿠야마저, 함종빈 역, (1990), 「역사의 종언」, 일지사, 63면 참조.

과거와는 전혀 다른 노선과 정책을 추구하였다.

계급투쟁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던 모택동시대와는 달리, 등소평시대의 중국은 계급적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국가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 대대적인 문호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여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촉진하려고 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중국은 이들 서방국가와의 정치적 경제적 유대를 확대 강화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80년대초부터 “自主獨立外交”를 표방하면서 소련과의 관계개선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대외관계는 1989년의 천안문사태로 말미암아 상당히 훼손되었고, 고르바췌프의 급진적 정치개혁이 동구의 몰락과 蘇聯邦의 해체까지 초래했다고 인식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옐친의 러시아공화국의 등장 또한 결코 환영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었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²¹⁾ 이후 국정운영의 핵심을 사회주의 견지의 안정 확보에 두었다. 정치영역에서 사회주의와 공산당 통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통제와 모택동사상의 학습을 강조하는 한편, 서방세계의 사상, 문화, 정신적 침투를 방지하는 3반투쟁과 반자산계급 자유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경제영역에서도 보수파가 강조하는 ‘治理·整頓’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여 결제에 대한 중앙의 계획성과 통제성을 강화하였다. 즉 국가계획위원회의 감독과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꾀하기 위한 생산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거시·미시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경제조직내에 당 기능을 강화했던

21) 천안문사태의 분석은 다음을 참조할 것. Lucian W. Pye, (1990), “Tiananmen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The Escalation of Confrontation from Moralizing to Revenge”, 『Asian Survey』, Vol. XXX, No. 1, pp. 25~41.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혁·개방을 포기한 것은 아니나, 4항기본원칙의 견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변화 충격은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중국식 사회주의에 있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당의 영도를 강조하는 이른바 4항기본원칙의 견지하에서의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이라는 보수파의 방침을 더욱 더 고수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소평 후기체제라 할 수 있는 현 중국 지도부는 대외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천안문 사태시의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서방측과의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자본주의 침투에 대한 대내외적인 위기의식으로 인해 그 개방의 폭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식 사회주의’는 정치적인 면에서 4항기본원칙의 견지를 고수하는 한편,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여 개혁·개방을 추구해 갈 것으로 보인다.



Ⅲ. 북한체제의 변화와 그 전망

지난 40여년간의 남북한의 냉전관계가 데탕트로 가는 조짐이 일고 있다. 시대를 역류하면서 남북한의 공존을 거부해 온 북한이 지난해 가을 UN정책의 전환을 기점으로 12월 들어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수락하고 연말에 가서는 핵무기 개발포기의 뜻을 선언하는 「非核化 공동선언」에 동의하고 나섰다.²²⁾ 이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공존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북한의 남북한 공존과 핵포기의사가 진정으로 확인되면 우선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도 진일보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한-중수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져 동북아시아에서는 국교없는 국가간 관계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 동북아시아에 있어 평화질서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정책의 변화는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사정의 타개 그리고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세계정세에 적극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89년부터 일기 시작한 동구공산권의 붕괴와 '90년도에 이루어진 동독정권의 서독에의 흡수 등의 사태에 대단히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북한은 외부의 압력에 대해 '우리식대로 살자'는 전략을 내세워 대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우리식대로 살자'는 식의 대응으로 이를 되받치기에는 북한에 밀려드는 견제 및 외교적 도전이 너무 벅찬 것이 되었다.²³⁾ 소련을 위시한 동구국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한국과의 수교러시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현상을 확대시켰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노태우대통령 사이에 있는 제주도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강력한 우방인 중국도 한국과의 수교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변화를

22) 丁世鉉, (1992),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화해 협력시대, 우리의 좌표와 과제」, 5~23면.

23) 고성준, (1991), 「내외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정치 경제적 개혁 그리고 주체사상」,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30호, 169~171면.

보이고 있어 북한은 이에 적극 대응할 상황에 처해있게 된 것이다. 소련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소련-북한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변화 역시 북한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소련은 지난해부터 그동안 행해온 석유공급에 대해 상계매입방식에서 현금결제 즉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태환성 경화로 그것도 국제시세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⁴⁾ 그러나 북한의 태환성 경화의 부족으로 소련으로부터의 석유공급이 거의 안되고 있어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지난해에 비해 50%나 악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생산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그동안 북한의 대외경제 파트너로 59%를 점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보수파의 구테타 실패 이후 소련은 붕괴되고 말아, 이제 형제국으로서의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연결고리로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됐으며, 그 대상을 일본으로 보고 조·일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접촉을 확대하는 것도 이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밖에 '80년 이래 연평균 3%의 낮은 성장에 머물다가, 작년에는 -3.7%의 성장을 나타내는 등 어려운 북한의 경제사정은 김정일 승계체제의 확립을 위한 주민들의 지지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²⁵⁾ 침체에 빠져있는 북한경제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개방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북한은 놓여있다.

국제질서의 탈 냉전화와 동북아시아의 데탕트 흐름 역시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도전현상의 하나이다. 양극체제의 준일극화, 경제력의 다극화, UN을 위시한 국제기구의 활성화,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쇠퇴경향 등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은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홀로서기'식의 대외정책을 추진함은

24) 예를 들어 북한은 그동안 소련으로부터 국제가격의 30% 수준에 불과한 우호가격으로 원유를 공급받아 왔었다. 중국도 1991년 5월 李鵬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1992년부터 국제시세의 50% 수준으로 도입하고 있는 원유에 대해 硬貨決濟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 민족통일연구원, (1991),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1~1992」, pp. 55~60.

1990년대의 로빈슨 크로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질서는 동북아시아의 기존흐름에 영향을 가해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게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한·소 정상회담이 상징해주고 있는 탈 냉전화는 동북아의 정치 및 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아직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나 그 기본방향은 상호 번영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과 교류의 확대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변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걸까?

우선 현재 진행중인 동구에서와 같은 변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구는 소련의 군사력에 의해 소비에트체제를 강요당하기 전에는 서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 내지는 전체주의적 문화에 익숙해 있어 그렇지 못하다. 또 소련과 동구와의 관계가 종속적이었다면 북한은 이미 소련의 예측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 되었다. 북한은 폐쇄정책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단절시켜 인민의 욕구분출의 심리적 동기마저 마비시키고 있으며, 관제집단을 제외하고는 인민에 의한 개혁운동을 이끌어갈 어떤 지식인 집단도 없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변화는 밑으로부터의 변혁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개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소련의 경우와 같이 통치자의 공산당이 지속적 지배를 위해 주민의 요구를 앞질러 수용하는 전술적 능동적 개혁이 될 것이다.²⁶⁾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나고 어떤 모습을 띠 것인가? 북한체제의 변화시기에 있어서는 국내의 견해를 대체로 두가지 방향으로 내다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변화는 김일성의 사망 내지는 정치적 은퇴가 예상되는 3~4년 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다.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이 모든 권위의 원천을 김일성 일인의 신격에서 찾는 상황에 있는 북한에서 누구도 <수령님이 창조한 제도>에 대해

26) 고성준, (1991),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한체제의 개혁", 한국정치학회, 「산업사회와 한국정치의 과제」, pp. 224~225.

문제를 제기하고 고치자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그 시기가 예상외로 빨라 김일성 생전에 북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도 김일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은 수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집무가 어려워질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으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무모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누구 못지 않게 심각한 경제난, 사회주의권의 대변화, 그리고 탈냉전적인 세계질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제개혁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70년대초부터 시작된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개혁의 과제를 김정일에게 넘겨주어서는 그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그동안 다져온 김일성체제를 살리고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체제에 대한 재편성 즉 북한식 페레스트로이카를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논자도 이 견해에 동조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주체식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소련과 동구에 비해 대단히 미흡할지는 몰라도 김일성에 의한 북한식 개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체사상의 재구성

김정일은 78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85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북한내부에 스며들어 체제를 동요시키는 것을 방지할 필요를 느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합영을 통한 선택적 개방이 초래할 사상적 부작용을 미연에 제거할 조치도 시급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노선의 강조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고양이다.’²⁷⁾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앞에서 행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그동안 북한의 강력한 이념적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의 체제개혁의 여파로 북한정치가 흔들리는 것을 예방하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소련과는 다른 독자적 사회주의 건설의 이론이 제시되어야 했다. 또한 두 공산국가의 개혁의 배경에는 현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보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위의 회복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축으로 재구성하여 이를 극복하는 이데올로기적 처방을 시도하게 되었다.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 최고의 뇌수인 수령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처럼 주체사상을 재정의하여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제에 대한 대중적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여 외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후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1987년)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1992)에 이르는 담화를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주체사상과 이에 토대를 둔 북한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강조하고 있다

27) 민족통일연구원, (1991), 앞의 책, 52면.

1)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재해석

김정일은 1991년 7월 담화에서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다시 거론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새롭게 체계화된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검토해 보면 크게 두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²⁸⁾

첫번째는 기존의 주장의 반복으로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의 강조를 논리적으로 확대 심화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뇌수'로서의 수령과 인민을 결합시키는 '혈관'으로서의 당,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인민대중을 삼위일체로 파악하는 일종의 국가유기체설을 전개하고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구심점이며, 인민대중은 당의 지도하에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함으로써 불멸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²⁹⁾

그러나 보다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재해석이다. 김정일은 생산관계의 변화에 착안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적 사회주의의 개념정의를 거부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형성 그 자체를 사회주의 이상과 동일시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수령과 당과 인민의 각각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로 결속되어 영생불사의 지복을 보장받는 혈연공동체가 북한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이상형이다. 김정일은 자본주의가 물질적 생산력에서 사회주의를 능가하지만 세속적인 가치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실현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만이 개인의 영생을 보장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위를 재확인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재해석의 논리는 인간의 현실적 삶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정신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유물론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관념론적 심지어는 종교적 논리로의 회귀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회주의의 재해석 작업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

28) 고성준, (1992), "북한의 개혁과 주체사상의 변화",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주체발표논문, 16~18면 참조

29) 김정일, (1986), "주체사상의 고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체사상연구」, (서울: 태백, 1989), 265면.

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원초적인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우위를 대전제로 확신한다면 부차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이 별문제가 안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새로운 사회주의론은 상위의 정신적 가치와 하위의 세속적 가치를 이원화시킴으로서 중세의 교회국가가 주장했던 양검론(theory of 2 swords)의 논리와 유사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체계화가 보여주고 있는 강화된 혁명적 수령론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정치적 개혁의 가능성은 난망해 보이며 다만 새로운 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세속적인 고층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경제개혁만이 가능해 보인다.³⁰⁾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등장배경으로서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소련이나 중국의 체제개혁운동에 편승하여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세력의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낙후에서 비롯되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이다.³¹⁾ 특히 남한과의 상대적 격차를 의식하면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재무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2) 현대자본주의론

김정일은 1987년 9월 “반제투쟁의 기치를 한층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담화를 발표하여 86년의 새로운 사회주의론의 연장선상에서 현

30) 이와 관련하여 최근 김정일은 정치개혁문제에 대해서 매우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의회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노동계급정당의 영도적 역할만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장한다. 김정일, (1991), “인민대중중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통일원 교육홍보국, 「북한 김정일의 담화내용 분석」, 「통일속보」 제91~17호, 14~16면.

31) 김정일, (1986), 앞의 논문, 267~268면.

대자본주의에 대한 일련의 분석과 처방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계급과 피착취 계급간의 기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제국주의 열강간의 대립과 갈등도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단정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 발전 과정은 사회주의의 승리의 역사이며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김정일은 전술한 내용과 상충되는 대단히 현실적인 논의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김정일은 현대자본주의의 국제관계가 상호대립관계에서 결탁과 협력의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그 결과 파멸에 직면하게 된 자본주의체제는 재생하여 경제 기술적으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정일은 다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되어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주의 국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됨으로써 상호의존적 관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³²⁾

둘째로 김정일은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를 정신적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풍요로운 물질생활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정신문화의 수립까지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자본주의는 물질적 번영을 구하는데 성공했으나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었으며 사회주의만이 양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김정일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내부적 변화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선진자본주의의 국가내에서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급구성을 변화시켜 기술노동이나 비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인텔리계급을 증대시켰으며 이들 계급은 부르주아사상의 영향을 받아 계급의식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자본가계급에 의해

32) 김정일, (1986), "반제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사상연구」, 앞의 책, 272~273면.

고안된 노사협조 및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대중의 경제적 요구와 사회복지가 실현되어 짐으로써 그들은 현실에 부분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른바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개량주의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김정일은 과격적인 논의를 행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돌파구를 자본주의국가가 낡은 국가경제질서를 버리고 공정한 국가경제질서를 수립하여 발전도상국의 경제기술발전을 협력하는 길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자본주의체제 타도를 포기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가능하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북한과 선진자본의 국가의 경제교류를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전통적인 주체이념의 고수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제국주의론이나 프롤레타리아혁명론의 수정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체제와 상호공존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약간의 인식변화를 곧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북한은 사회주의 기본질서를 고수하는 바탕위에서 선택적인 개혁과 개방만을 시도할 것이고 그 범위와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성 있는 예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새롭게 강화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체제존속과 현실적 문제해결의 이중적 과제를 시도하여 상호 모순적인 두 방향—신성화와 세속화—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무게의 중심은 역시 체제방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치적 부문

김일성은 소련과 동구의 개혁과 관련되어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90. 5. 24~26)에서 북한의 대응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함은 사회주의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서 김일성은 북한사회의 발전은 항일투쟁에서 비롯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원리·원칙에 의거해야 함을 강조했다.³³⁾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오히려 기존체제와 노선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수령중심의 유일지도체제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민주화추세를 의식한 부분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 권력구조상의 변화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선거이후에 나타난 북한의 권력구조상의 변화는 대체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과거와는 달리 혁명 일세대(최광, 최영림 등)의 부상이 부분적으로 눈에 띄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이 이 세력들을 재규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다른 한편 기술관료층의 등장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기관에 있어 경제관료의 숫자를 늘렸고 부장급의 기술전문분야의 부서를 추가 신설했다. 또한 제9기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구성에서 박사, 교수 등 학위직 소지자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지난 8기의 56%에서 64%로 증가되었다.³⁴⁾ 혁명 일세대가 이데올로기 지향적이라면 기술관료층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실무형의 지도층인대 이들도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등용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세대들을 등장시켜

33) 「로동신문」 90년 5월 25일. 고성준, (1991),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한의 체제개혁”, 226면에서 재인용.

34) 고성준, (1991), 위의 논문, 227~228면.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소위 이원적으로 체제의 적응력을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2) 의견상 다당제의 수용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인민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회이기에 정치적 다원주의와 다당제가 필요없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오히려 인민대중의 정책적 통일을 파괴하고 사회주의체도를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에 있었던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의견상 다당제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선 대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인물서열을 발표할 때 사회민주당 이계백위원장을 31번째로 거명했다. 또한 선거결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에 있어 그동안 거의 의석을 가지지 않아온 사회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7.4%, 천도교청우당 3.2%, 무소속 1.8%로 나타났다.³⁵⁾ 이는 소련과 동구의 민주화 추세를 의식하여 나온 조치로 진정한 복수정당체로의 발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우 그 핵심이 다원주의의 인용임을 볼 때 정치민주화로 나아갈 때 이 조치는 진정한 다당제의 틀이 될 수도 있다.

3) 최고인민회의의 역할강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내에 통일과 외교관련 위원회를 신설하여 그동안 형식적인 법안 심의 및 예산심의기능에 그쳐진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89년도 11월에는 外交委員會를, 90년 최고인민회의 개최시에는 통일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에 尹基福을 임명하였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민주화를 의식하여 명목상의 최고주권기관에 불과한 최고인민회의를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다.

35) 위의 논문, 226~227면.

또한 외교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이데올로기 중심의 당외교에서 벗어나 국가 및 의회의외교가 주를 이루는 현실주의적 흐름에 조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개편은 당·영도체제에서 의회 및 국가기관의 분리내지는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나가는 것으로 미흡하나마 다원주의의 틀을 형성케 할 것이다.

3. 경제부문

김일성은 위에서 살펴 본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권의 개혁 특히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사회주의가 경제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결을 소련과 동구식의 자본주의적 방법에 입각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84년 합영법 이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왔고 최근 2년동안 더욱 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반사회주의적 원리에 입각해 있어 <조용한 혁명>, <실무혁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1) 憲法개정 : 私有부분 허용

북한은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현행헌법을 대폭 수정 제2장 「경제」가운데 「협동단체소유」를 규정한 제20조에 개인 소유의 인정 및 보호구절을 추가하는 한편 단위기업소이익의 일부를 소속근로자 개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22조에 의해 개인소유로 인정돼온 「터밭」 생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북한에서 성행하고 있는 암거래 수익도 개인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격 경제개방에 대비 중국헌법을 본떠 외국기업과 경제조직, 개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보호를 규정하는 합영관련조항들도 신설했으며, 제31조의

「계획경제」를 「지도적 계획경제」로 고쳐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금 전면 폐지를 선언한 제33조 역시 「형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고 고쳐 제한적 세금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은 밝혔다.³⁶⁾

2) 市場經濟原理의 도입과 확산³⁷⁾

북한은 지난 84년 8월 3일 김정일의 지시로 <인민소비확대(83)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은 89년도부터 생필품 증산운동 및 직매점설치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했다. 그 이후 이러한 방식은 주택건설분야를 위시한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시·군 단위로 농민시장 내지는 도시의 상설시장을 공인했다. 이를 통해 식량의 배급제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인데, 이곳은 현물구매 또는 물물교환의 장소가 되고 있다.

3) 부분적인 私經濟 行爲 허용

최근의 북한방문자들에 의하면 도시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채소나 음료수 등을 파는 행상과 광장에 있는 사진사 그리고 기차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三輪車 운전자 등이 바로 그들이다.³⁸⁾

또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공장이나 현금 보너스 내지는 잉여수확분의 자율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4) 貨幣經濟로의 轉換

그동안 사용되어 온 양권 등의 배급표 대신 새 지폐의 유통이 늘고 있고 은행에

36) 「조선일보」 1992년 5월 15일자.

37) 고성준, (1991), 앞의 논문, p. 229.

38) 김연수, (1990), 「북한에서의 열흘」 (1) 「조선일보」 1990년 9월 22일.

예금을 하는 경우 이자가 지급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제도도 실시되면서 당첨자는 고액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됐다.³⁹⁾

5) 두만강유역에 經濟特區 조성계획

북한은 91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UNDP) 회의에서 두만강유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중국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국제세미나」(91. 8. 29~31)와 평양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91. 10. 15~21) 회의에서 북한은 「선봉지구 경제무역지역개발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선봉, 나진, 청진 등에 경제특구를 선정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부문

북한은 그동안 생활환경과 정보의 통제로 사회의 획일화를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情報의 통제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으나 인민들의 생활환경에 있어서는 완화조치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선 일정 戰略地域(청진·함흥·판문점) 등을 제외하고는 여행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 여행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해변과 산간 등지에 많이 확충되고 있다. 주민들의 옷차림과 머리모양이 현대화,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바둑·야구·골프 등 <資本主義的>인 레저 스포츠 등이 등장하고 있다. 대중가요나 영화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⁴⁰⁾

39) Gary Klintworth, (1990), "Pyongyang Perestroika", 「For Eastern Economic Review」, 1990년 7월 12일, pp. 21~22.

40) 그러나 최근 북한은 지난 90년부터 주민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 「휘바람」을 금지곡으로 규정 주민들이 부르지 못하게 했다. 「휘바람」은 한 청년의 짝사랑을 빠르고 경쾌한 리듬이 담겨 특히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 노래를 북한이 갑자기 금지곡으로 규정한 것은 주민들의 「사상해이」를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1992년 6월 11일.

IV. 독일통일의 과정과 현실

20세기 후반 국제관계사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세기에 들어서 두번씩 세계대전의 장본인이었던 통일독일의 탄생이 틀림없을 것이다. 2차대전의 결과로 분단되었던, 한반도와는 비교해서 너무 강대해서 분할했지만, 독일이 통일이 되어 국제무대에 복귀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화유지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분단의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민족의 입장에 본다면, 매우 찜찜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분단이 계속되면서, 반공민주정부와 공산정부라는 두개의 상극체제가 대치해 왔다는 점에서 독일과 우리와 같다. 다만, 독일은 서로 전쟁을 치루어 민족분단까지 진행된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⁴¹⁾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른 분단국가였다.

한국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이후에, 동서진영간의 냉전으로 분단과정을 걸어왔으나,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평화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이 달성한 통일의 의의는 남북분단 46년만에야 「南北基本合意書」를 채택하여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통일과정을 우리가 미래에 겪을 수 있는 통일과정의 하나의 모델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나타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독일정부의 대책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이를 한반도 통일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독일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1) 박성조, 양성철, (1991),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Horst Brezinski, (1991),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a German Monetary Union", A Paper at the 8th German-Korean Conference on Consequences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 Divided Korea, Seoul, October 1991.

1. 하나의 독일을 위한 동서독의 노력

독일은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연방국가의 형태로 통일되었다가,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분단국가가 되었다. 전승국들이 연합국들이 독일을 분할한 배경에는 그동안 독일이 주변국가들에게 침략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침략전쟁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⁴²⁾

1949년 동·서독으로의 분단국가가 수립되면서부터 1961년 베를린장벽의 구축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동서독이 각기 자신들이 독일에 대한 정통성과 단독대표권이 있음을 주장해 왔다. 다만 냉전체제가 전개되면서 서독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그리고 동독은 WTO(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서독은 EC(유럽공동체)에, 동독은 COMECON(공산권 경제상호원조회의)에 가입하여 동·서독이 각기 다른 진영에 속함으로써 구조적으로 통일이 어렵게 되게 되었다.

이러한 냉전적 동서독관계는 1960년 후반부터 무르익기 시작한 데탕트 추세에 힘입어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하게 되는데 브란트 총리가 이끄는 서독정부는, 69년에 먼저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책의 전환을 하게 된다.⁴³⁾

1) 서독의 노력 : 브란트의 「民族分離의 克服」 정책

동·서로 나누어 있어 분단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는 베를린 시장을 오래 역임한 브란트 총리는 서부독일의 동독정책에 있어 새로운 기원을 시도하였다. 그의 대동독정책은 우선 동·서독의 분단구조는 일차원적이 아니고 다차원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독일의 분단이 단순히 국토만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민족이 분리되고 이데올로기가 분열되고 정치권력이 나누어졌으며 경제와 복지에 있어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

42) 세종연구소, (1990), 「동서독 통일의 전망과 동독 움직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성남 : 세종연구소), 22~36면.

43) Werner Kaltefleiter, (1973), "Europe and The Nixon Doctrine : A german Point of View", 「ORBIS」, Winter 1973. pp.76~85.

다.

또한 분단독일을 중심으로 NATO와 WTO의 핵무기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의 경계선을 철폐하고 국토를 통일하는 일은 유럽이 통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서독으로 나누어진 국토분단의 극복이 현단계에서 불가능하므로 분열된 이데올로기의 극복과 분리된 양 체제의 극복은 어렵다고 그는 보았다.

평화통일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분단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분단상태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겼다. 베를린 시장으로 있으면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체험한 그로서는 동서독의 분단선을 그대로 둔 채 헤어진 가족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⁴⁴⁾

우선 그는 국토분단의 비극은 극복 못할지라도 민족분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이 급선무로 보았다. 이러한 생각이 가시화되어 나타난 것이 72년 5월 양독간에 정식으로 조인된 “동서독일반통행협정”이며, 동년 12월에는 동서독간의 화해와 공존을 다지는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 기본조약에 의거 동서독은 73년에 UN에 동시가입하여 회원국이 되었고, 미·소를 포함하는 여러 나라들의 교차승인을 받기도 했다. 브란트의 이러한 동독정책은 일부로부터 「분단고착론자」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국토가 양분되어 분리되었던 민족에 상호방문의 기회를 만들어 서로 재 상봉이 가능케 하였다. 국토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분리된 민족의 재결합이라도 실현해 보자는 브란트의 <벽돌쌓기정책(block-building policy)이며, 이 정책이 장기간 추진될 때 분단의 벽을 허물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⁴⁵⁾

44) A. M. Hanhardt, Jr., (1982),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Current History』, 1982 November, pp. 366~368.

45) D. P. Conradt, (1982), “The End of An Era in West Germany” 『Current History』, 1982 December, pp. 405~406.

민족의 재결합은 먼저 동서독사이에 편지, 소포, 전화를 주고 받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개설로부터 시작되어 상호여행 및 상호방문이라는 인적 교류로 이어졌다. 그 결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2백73만명 이상의 동독사람들이 서독을, 반대로 5백 22만명 이상의 서독사람들이 동독을 방문하여 하나의 독일인이라는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경제협력은 외국무역이 아닌 국내교역으로 했는데, 서독은 통상에 있어 특혜를 주고 대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면서도 선전과 생색을 떠나 실질적이고 조용한 교류를 추진했다. 특히 서독은 경제협력을 함에 있어 동독사람들의 생활고를 덜어 주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활발한 문화교류는 동독사람들로 하여금 독일민족 공통의 문화와 역사를 접하게 하여 민족적 일체감을 갖도록 했으며 사회주의체제의 허구성을 깨닫게 했다.⁴⁶⁾ 70년대 초부터 매스컴교류가 실시되어 동독에서 서독의 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고, 서독에서 출간된 신문, 잡지가 동독 어느 곳에서나 제한없이 반출, 판매되었다. 일찍부터 서독의 재정부담으로 동서독의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독일어대사전」이 편찬되어 국어교육의 토대가 되었다. 언어의 이질화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도 학술교류를 통한 민족 동질성회복의 한 예이기도 한다.⁴⁷⁾

2) 동독의 노력 : 동독민중의 「무작정 통일」 선택

70년초부터 시작된 동서독간의 상호방문은 동독사람들로 하여금 동서독간의 복지와 자유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게 하여 양체제에 있어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를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⁴⁸⁾

46) Ibid., p. 407.

47) A. M. Hanhardt, Jr., (1984), "The Prospects for German-German Detente", 「Current History」, 1984 November, pp. 380~381.

48) Melvin Croan, (1983), "The Politics of Division and Detente un East Germany", 「Current History」, 1983 November, pp. 369~372.

이러한 가운데 동서독관계에 변화를 예고하는 소련의 새로운 대동구정책이 1989년 발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구를 강점해 오던 소련이 이른바 시나트라 독트린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가수인 후랑크 시나트라와 유명한 노래 「My Way」를 상징해서 붙인 이 독트린은 동구 여러 나라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폴란드에서 맨 먼저 비공산 연립정권이 수립되면서 다당제의 도입, 시장경제의 확립, 언론의 자유표방 등이 이루어졌다. 헝가리는 스탈린주의와 결별하면서 개혁을 가속화하여,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 처져있던 철조망을 절단하고 국경개방조치를 내린다.

이러자 많은 동독국민들이 오스트리아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러시를 이루면서 동독의 민주화시위가 가열되기 시작했다.

동독 제2의 도시인 라이프치히에서는 89년 9월 민중을 이끌 ‘신광장(Das Neue Forum)’이라는 재야단체가 결성되어 공산당정권에 고개를 들고 결연히 민중적 항의 데모를 시작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총선이었다.⁴⁹⁾

그 결과 공산당 서기장인 호네커가 물러나고 크렌츠가 후임으로 등장하여 페레스트로이카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미 동독체제에 회의를 가진 민중은 이에 만족치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베를린장벽」을 허물었으며, 공산당정권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총선거를 약속하기에 이른다.

90년 3월에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동독민중들은 서독의 콜 총리가 주도적으로 지원한 기민당(CDU)을 주축으로 우파의 3당이 결속한 독일연합(AD)에 압승을 안겨주었다. 이로써 동독민중들은 현실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나타냈으며, 통일의 방법으로 동독공산체제를 포기하고 신속하게 서독체제로 흡수하는 길을 원했던 것이다.⁵⁰⁾

49) Dieter Reiher, (1991), “독일의 교육통합체제 개발을 위한 정책”, 「한국 중국 독일의 교육통합정책에 관한 심포지움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참조.

50) 통일대비 특별정책연수단, (1991), 「독일통합실태연구」, 통일원, 참조.

서독으로의 여행과, 서독 텔레비전방송을 통해서 동서독의 복지격차를 실감한 동독의 일반민중은 당장 서독의 동포들처럼 잘살고 싶었으며 그러기에 통일을 미룰 수 없는 일로 삼은 것이다.

동독총선에서의 기민당의 승리로 동서독관계는 더욱 가까워져 5월에는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이 서명되었고 7월 1일에는 그동안 동서독을 나누어왔던 분단의 경계선이 아주 없어지게 된다. 마침내 10월 3일 동독은 서독에 정치적으로 흡수되어 서독체제에서의 합병형식의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독일의 통일은 <동독에서의 선거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⁵¹⁾ 동독의 민중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서독사람들은 관객의 입장에 있다가 동독인들로부터 통일을 강요받은 셈이 되고 말았다.

2. 통일독일의 현실⁵²⁾

대립되는 두 체제를 내부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 사민당은 서독이 아직 통일의 비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고, 녹색당은 무작정 통일이 가져올 여러 부작용을 지적하며 5~10년간 별도의 정부를 가지고 국가연합단체를 거치는 점진적인 통일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독의 일반민중은 급속한 통일이 동서독 양측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를 가버어 여간채 즉각적인 통일로 내달았다. 마치 통일은 무조건 옳은 것이며 통일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동독의 민중은 가지고 있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7개월이 지나고 있다. 게르만 민족의 지상과제였다고 볼 수 있는 통일이 실현되었는데도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통일의 감격은 구서독이나 구동독에 있어서나 찾아볼 수가 없다. 91년 초 통일된 독일을 방문한 최정호 교수에 의하면

51) 통일원, (1989), 「동서독 교역의 실무절차에 관한 연구: 서독측을 중심으로」 통일원, 참조

52) Karl Kaiser, (1991), "Unity's Shadow" 「Time」, July 1, 1991.

독일인들에게 통일의 감격은 순간이고,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통일이 되고 나서는 통일독일의 국민들은 모두다 행복치 않은,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 舊동독지역의 「통일휴유증」

통일만 되면 서독지역처럼 잘 살 수 있으리라는 동독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통일후의 동독지역은 오히려 동일이전보다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좋아지기는 커녕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1) 대량실업의 문제

소련의 중심이 되어 각 나라가 분업적 성격을 띤 공산권 경제협력 (COMECON)의 일원으로 역할해 온 동독경제는 노후화된 자본재시설, 낮은 생산력, 그리고 관리의 비효율성과 노동자의 근로의욕저하 등으로 인해 국제시장경제의 틀속에서는 경쟁력이 없었다. 따라서 구동독기업의 3분의1은 경쟁력이 없어 문을 닫아야만 하는 문제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76만명의 완전 실업자와 거의 일거리가 없는 86만명의 음성 실업자가 생겨났다. 이에 덧붙여 실업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50만명의 노동자가 조기 정년퇴직을 당하고 있다. 그 결과 동독은 통일이후 세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실업자가 되어 있는 셈이다. (『동아일보』 91년 3월 25일자, 최정호, “통일독일 다시 본다”)

완전고용이 보장된 사회주의체제에서만 지내온 구 동독지역의 사람들에게 실업사태는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인 것이다. 그렇게 소망했던 통일이 구동독지역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실업이라는 시름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이다.⁵³⁾

(2)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

작년 7월 경제와 통화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첫 4분기동안의 동독의 冶金생산은 3분

53) Gerd Langguth, (1991), "Germany, the EC and the Architecture of Europe: The German Question in the Context of the EC", 『Außenpolitik』, Vol. 2, 1991.

의1로 줄어들고, 식료품생산업자는 60%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공업생산은 50%로 줄어들 동독의 GNP는 지난 한해 2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동아일보』 91년 3월 25일자.)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폐쇄되지 않은 공장은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고, 낙후된 통신망,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없이 동독지역의 경제발전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동서독경제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1:1의 화폐통합이 가져온 「가격상승충격」으로 오른 집세와 물가과의 어려움 역시 동독인들이 통일 이후 겪는 일이다.⁵⁴⁾

(3) 심각한 환경오염

동독지역의 대기오염은 대단히 심각하다. 동독지역은 지난 70년대초의 유가폭등과 에너지 과동시부터 전력생산을 유향함이 높은 갈탄에만 의존했다. 그 이후 동독의 모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약 6백만톤의 유향산가스가 도시지역의 공기를 오염시켰었다. 그 결과 동독지역의 산림중 4분의3이 죽어가고 있고, 주요 산업도시에는 스모그 현상이 심각하다.



이밖에 쓰레기 처리, 과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의 하천이 오염되고, 땅속의 지하수도 마찬가지다. 또한 농지도 지나친 농약의 살포로 중금속 오염이 매우 심한 편이다.⁵⁵⁾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 일등 공업국이라는 동독지역이 하늘의 공기에서부터 땅위의 하천, 땅 속의 지하수 그리고 토지에 걸쳐 환경오염은 총체적이다.

54) Werner Gumpel, (1991), "The Mentality Problem in the Transition Process from Generally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A Paper Presented the 8th German-Korean Conference on Consequences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a Divided Korea, Seoul, October, 1991.

55) Karl Kaiser, op. cit.

2) 부담스러운 서독의 「통일비용」

서독체제로의 동독체제의 흡수통합은 통일연방정부로 하여금 구 동독지역이 안고 있는 <통일휴유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동독의 800만 노동인구중 300만명에 이르는 실업대책, 파국속에 직면한 환경오염의 시급한 회복, 낙후되고 비능률적인 동독지역의 산업합리화와 현대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동독경제를 지원해야 할 통일비용은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결국 자신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충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구 서독지역의 사람들의 반발은 큰 것이다.

이미 통일이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됐다고 평가를 받아 온 마르크스貨의 가치가 국제시장에서 대폭하락하는 추세이고 지난해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서독의 무역수지가 금년 들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플레이는 3.5%선을 나타내고 있고,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작년수준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⁵⁶⁾

구 서독지역의 사람들은 독일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통일이 되어 구 동독지역의 경제지원에 그 원인이 있다고 구 동독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 21일은 라인란드 팔트주(집권 기민당 콜총리의 출신지역) 의회선거에서 집권 기민당이 40년만에 처음으로 사민당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또한 구 동독기업의 민영화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영기업관리공단의 책임자가 구 동독의 부실기업의 폐쇄와 실업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적군파에 의해 암살당하는 일이 최근 발생하기도 했다.

3. 독일통일의 교훈

독일통일의 탄생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분단국인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 우리가 독일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을 수는 없지만 독일의 경우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통일

56) Heinz Suhr, 정중재(역), (1991), 「독일통일비용」, 통일원, 참조

문제 해결의 열쇠를 모색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동서독이 통일된 국가로 통일되기까지에는 동·서독 각자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이다. 동서독이 서로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체제이기에 국가통합을 우선시 한다면 통일로의 길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산가족재회,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여 동서독의 분단이 가져온 고통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 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합의를 이루어 통합해가는 「작은 걸음의 통합」을 누적시켜 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⁵⁷⁾

둘째로 독일의 통일에의 노력은 유럽에서 형성되어가는 새 질서 구축과의 조화를 이루어 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부 독일의 통일정책은 최근 유럽에서 일고 있는 데탕트의 물결과의 조화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국제정치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되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독일이 통일되므로 유럽의 국제질서 속에서 불리한 지위로 밀려나갈 강대국이 생긴다면 강대국은 결코 독일의 통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독일의 통일 노력은 강대국 간의 조성된 새질서에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치되지 않는 통일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독일통일의 경우가 잘 실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째, 동서독으로 분단된 이래 그렇게 열망해 오던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동서독의 사람들 사이에 통일의 휴유증과 통일비용의 문제로 마음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이후 구 동독지역의 경제가 통일 이전보다도 더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그 원인은 서독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동독지역의 사람들이 서독사람들에 대해 배신감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 반대로 서독의

57) Hans-Joachim Veen, (1990), "German Unity : Public Opinion and Voting Trend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3, No. 4 (Autum, 1990), pp. 34~38.

사람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구 동독지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불해야할 통일비용이 늘어나면서 통일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된 후 동서독 사람들이 다같이 겪는 심리적 통일휴유증이 말끔히 걷히지 않는 한 통일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여년 동안의 교류와 협력에다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선진국인 서독의 국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이 결코 이상향도 낙원도 아니라는 현실을 보면서 분단의 극복의 과제를 안은 우리로서는 통일을 위한 준비를 새롭게 해야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통일 그 자체를 서두르기 보다 통일후에 찾아올 휴유증을 지금부터 대비하여 통일비용을 저축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닐까 한다.



V.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모색

통일을 “일정 영역내의 이산집단 내에서 개개인 간의 이해와 견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필요한 변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인 공동체 의식(sence of community)이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기구가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⁵⁸⁾라고 할 때, 통일교육은 각기 다른 이질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이해와 공동체의식을 형성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특히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통일 이후에 있을 상당한 상태로의 변화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서도 통일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통일대비교육과 통일이후교육의 두단계로 나누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⁵⁹⁾

첫째, 통일대비교육—통일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교육으로서 평화공존시대를 거쳐 통일을 이룰 때까지의 교육이다. 지금으로서는 국제정세의 변화 및 남북간의 대화 추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태도, 사고, 가치관, 행동규범 등을 습득케하는 교육이다.

둘째, 통일이후교육—통일을 이룩한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화에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규범 등을 이해시키고 습득케 하는 교육이다.

즉, 통일교육이란 분단국가가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또한 그것에 목표를 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분단된 민족사회를

58) 이상우편(1987), 「통일한국의 모색」, (서울: 박영사), 99-101면.

59) 백종억(1992),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 방향 탐색」, 「통일문제연구」, (3호, 1992), 200면

하나의 민족사회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리된 민족이 단일하고 궁극적이며 권위적인 정치권력의 원천 밑에서 공통이익을 위하여 보다 큰 단위를 형성하고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한 국가의 통일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1960년대 후반에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국민국가를 이룩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⁶⁰⁾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북한도 어느정도 선택적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을 가지고는 현재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개방화된 통일교육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역사창조적 민족작업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에서 행한 통일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⁶¹⁾ 현대에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에서 특히 서독에서 행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독에서 실시한 통일관정립을 위한 교육적 노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해설할 수 있다.

60) 전후세대의 북한관에 대한 한 실증적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전후세대는 국민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통일의 다위성에 대해 상당히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견해를 보인다고 하고 있다. 김정택(1987), 「전후세대의 대북한관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27집, 79-102면 참조.

61) 독일이 통일되기 전 1978년부터 행한 교육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독일문제는 동시에 유럽문제이다. 독일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평화지향적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독일의 항구적 분단은 여러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미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의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동독에 있는 독일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인 의무이다. 인권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동독의 독일인들은 그들의 발전에 대해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확고한 우리의 목표이다. 서독이 독일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정세구(1992),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교육월보」 1992년 3월, 29면.

첫째, 독일 분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역사적 지식을 주려고 하였다. 그것도 독일문제만으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넓은 유럽문제로서 다루게 하였고, 독일의 통일이 이웃 국가들과 어떤 함수관계,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알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이 분단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독일 통일의 문제를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넣어 주려고 하였다. 셋째, 민족의 개념을 통하여 독일 통일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하였다. 독일의 불행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국가사회주의는 국가개념을 종속적·생물학적 의미에서 산화적인 의미로 높게 끌어 올리고 국내 억압과 외부 팽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오용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민족을 중심으로 개별적 구성원들의 의사가 결집된 것이므로 민족 통일의 길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넷째, 인권의 존중을 통일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인권이란 기본권으로서 그에 대한 요구는 국제법적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주민의 인권을 요구한다고 해도 내정간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유엔헌장의 조인국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엄수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독일분단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게 함과 동시에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독만이 독일 전체가 아님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통일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파악케하고 공산권에서 동독이 가장 높은 생활 수준에 도달한 점을 인정토록 하였다. 또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동독의 젊은이들과의 연대감 형성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서독의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통일 정책과 연결되어 90년에 독일통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의 사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이데올로기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그것은 공산주의 비판이 지나치게 단선적인 비판이었고, 반복한 및 반공산주의 홍보에 있어 단순반복되고 있고, 민간차원의 자발적

인 통일교육이 결여되었고, 일방적 강제 주입식 교육이었고, 자료의 제약, 통일문제를 보는 관점의 지나친 획일성⁶²⁾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이러한 것은 민족동일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라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재까지의 통일교육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재까지의 우리의 통일교육

한국전쟁 이전에 있어서 통일이란 외세에 의한 강요된 비정상적 분단상황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단순한 의미의 민족적 과제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므로써 통일교육의 비중은 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멸공, 통일교육에 두어졌다. 이것은 이승만정권이 통일정책으로 내건 북한만의 통일정책, 북진통일, 멸공통일정책과 일면 상통한다.⁶³⁾ 따라서 이 때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목표제시가 없는 멸공구국 정신의 함양과 반공사상의 고취로 구성되었다.

1960년 4·19 학생의거로 민주당정권이 들어서고 난후에 통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통일교육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듯 했으나 자유당정권의 통일교육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 때 민주당정권의 통일정책⁶⁴⁾은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룬다'고 하면서 비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라는 기존의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안으로는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증강에 주력하였고, 밖으로는 외교강화를 통해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역량배양의 토대위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실천적 노력

62) 소홍렬(1985), "통일교육의 현실과 방향", 『통일』, 63-65면 참조.

63) 이에 대해서는 박운동(1987), 「사회주의 정당의 통일정책연구」, 한국정치학회보 18집 참조.

64) 민주당정권의 통일정책에 관해서는 시인사 편집부편(1988), 「한국의 주요정당, 사회단체의 강령 정책」(시인사), 183-187면 참조.

에 주력하였다. 초기는 무분별한 통일논의에서 야기된 국론분열을 극복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고 따라서 통일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선건설 후통일’이었다. 1970년 ‘8·15 평화통일구상선언’ 이후는 평화통일정책의 본격적 추진기로서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추구되었다.⁶⁵⁾ 그리고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제3공화국의 연속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정책에 맞추어 통일교육은 우선 목표를 반공통일·승공통일론에 두어, 국민윤리과목을 신설하고 교육시간을 늘렸다. 제 3, 4공화국에서의 통일교육은 우선 평화통일을 목표로 국민정신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이전 시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반공, 승공에 초점을 둔 이전의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정부는 ‘통일되고 독립된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평화통일을 향한 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화통일 노력은 첫째,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 상호방문과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 제의 둘째, 통일문제와 남북한 관계정상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제시 셋째,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20개의 시범실천사업’등의 제시로 구체화되었다.⁶⁶⁾ 이때의 통일교육의 변화는 유신이념교육을 철폐하고 대학에서 국민윤리과목의 4학점 이수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 당시도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통일교육의 흔적을 찾아볼 수 가 없다.

제6공화국들어 국내적으로는 사회각계의 민주화 추세 속에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분출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동서화해와 공산권의 개방·개혁 물질 등 세계질서의 재편 움직임에 따라 바람직한 통일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아래서 제6공화국 정부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적 열망을 포용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펴 왔다.⁶⁷⁾ ‘7·7특별선언’, ‘유엔총회연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일에

65) 통일원(1990), 「통일백서」, 통일원, 28-36면 참조

66) 통일원, 앞의 책, 36면.

67) 같은 책, 72면 참조

대한 입장은 선평화 정착, 후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2. 전향적 통일교육을 위하여

지금까지 역대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변화를 시간적 순서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반성으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괴리이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국내외적 상황의 산물인 것이다. 그래서 1980년 중반 이후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해체되기 전까지 우리의 통일정책은 반공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통일교육도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통일교육의 목적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계획하에서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력을 원리적이고 이론적 수준에서 배양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에 책임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⁶⁸⁾고 할 때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분단고착화로 혹은 안보논리 차원으로 흐르지 않았느냐는 비판과 함께 나아가 명확한 교육학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정책상의 고려에 의해 혹은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political selectivity)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이론적 체계나 교육내용 및 방법상의 일관된 틀을 지니지 못한채 그때 그때의 정치적 목표구현에 동원되는 우를 범해왔다⁶⁹⁾는 지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냉전체제의 해체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반공

68) 신상조(1992),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1992년 3월, 42면.

69) 추병완(1992),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1992, 174면.

교육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두고 기존의 통일교육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통일교육의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통일교육 지원 관리 체제 등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통일원이 선정한 통일교육의 목표가 있어 왔지만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교육 또는 통일에 대비한 목표에 주로 중점을 주어 왔을 뿐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내용까지는 다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과목에만 편중되어 실시함으로써 기대하는 만족한 성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체제의 비과학성, 교육자료의 비효율성, 관점적 교육⁷⁰⁾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은 국민학교부터 시작하여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동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즉 통일교육에 대한 양적인 측면(반복적인 반공, 반복한교육)만 늘어날 뿐 질적인 측면(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통일교육)이 무시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단편적이거나 구체성을 결여한 정책, 학사행정당국의 이해와 협조 부족, 연구비와 자료지원의 비연속성, 대중의 무관심, 전후 세대의 급증, 사상적 유동, 민간 및 재계인사들의 이해부족과 무지, 불신 풍조, 북한의 심리전 강화, 풍요로 인한 안일한 사고촉진 등을 들 수 있다.⁷¹⁾

둘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감정과 정의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교과중심의 주입식 교육학습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들에게는 동기유발과 흥미유지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감까지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70) 김호길(1988), "국제화시대의 통일교육과 이념교육", 부산외국어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국제문제논총」, 1988, 195면 참조.

71) 김호길, 같은글, 159면.

통일에 대한 합리적 사고,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민주 사회적 기능들의 도외시된 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호소하려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참다운 민족 공동체 의식이 형성에 장애가 되어 왔다.

세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교육은 남북한 대결상황을 의식하여 그 출발에서부터 지나치게 그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을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사회로 본다든지, 또는 북한 지도층이 요구하는 주장과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는 점, 북한의 사회제도나 생활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를 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이질감만을 부추기는 것이다.

네째, 통일교육이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차 이루게 될 통일조국 속에서 능동적으로 기능하게 될 민주시민의 육성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들과 상대했을 때 건전한 민주적 사고방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볼 때 공산주의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만을 강조해 왔을 뿐 민주시민 육성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교육정책자문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살펴보면⁷²⁾, ①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절충 또는 상호 양보를 완전 배제하고 있음, ②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의식을 특히 강조한 반면에 통일에 대한 상상력, 논의 방식, 절차, 통일방안의 평가안목 등을 소홀리 취급함, ③ 통일이후 시기에 대비한 교육이 경시됨, ④ 유아기 교육에서는 통일교육이 소홀리 취급되고 있음, ⑤ 민주 시민적 자질 육성을 통해

72) 교육정책자문회의(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정책자문보고」 1990. 8. 21, 4-7면 참조

통일 실천 역량을 증대하고 통일 이후 민족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 관건을 두어야 함에도 이제까지 그러하지 못하였음 등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첫째, 냉전의 한축이었던 소련과 동유럽이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공산주의를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반공이 아닌 진정한 민족통일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던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민족의 한부분으로 이해하고, 민족적 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 주민이 민족공동체의 성원으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인식의 혼란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과 민족공동체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셋째,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족분단의 배경과 성격, 분단의 고통과 손실 등 통일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오늘날 국내외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정확한 시각과 체계화된 견해를 갖출 수 있도록 통일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미래의 통일국가가 당면할 제반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통일조국의 미래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주시민으로서 육성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통된 합의를 도출해 낼려고 할 때,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킬 때 통일 문제 논의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하여 통일관련 재반 사회갈등의 성숙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⁷³⁾

여섯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없애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자료의 과감한 개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관념화시키지 말고 현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반복교육이 아닌 북한의 실체를 파악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일곱째,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자료의 개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 수동적인 체제 옹호가 아닌 적극적인 체제 옹호를 위해서도 자료의 개방은 필요하다. 여덟째, 통일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의 긴밀한 연대속에서 능동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민간차원에서의 연구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민족 연대감이 강화되고 일부 젊은 이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관념적 선호감이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통일교육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73) 김영민(1992),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과제와 방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새 방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제9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2, 62면.

VI. 결 론

1992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21세기를 향한 20세기도 이제 8년이 남았다. 세계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에 진입하려는 듯 대변혁의 물결속에 출렁이고 있다.

20세기를 지배해 온 중요한 흐름의 하나는 공산주의의 등장과 팽창이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깃발을 나부낀 러시아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 따라서 세계는 이를 저지하려는 이념과 체제로 양분되면서 형성된 냉전체계가 20세기 후반의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1989년 11월 독일분단의 상징인 동서베를린을 가르는 벽이 동독시민의 손으로 무너지고 90년 10월 마침내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냉전체계의 지배시대가 끝났다.

이러한 국제체계의 변화는 크게 198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어 1989년에 절정을 이룬 공산체계의 자기변신에서 비롯된다.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사망에 뒤이은 약간의 과도기를 거친 뒤, 1985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기존의 극심한 관료주의적 병폐와 사회적 생산력의 저하 등 소련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을 지적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는 소련이 시대상황에 맞지않는 사회주의 이념,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 경직화되어 있는 국가의 제반조직, 그리고 황폐하거나 낙후된 경제 등에서 초래된 체제의 전반적인 정체성과 비능률성에 젖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소련사회를 근본적인 변혁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질적으로 새로운 체제로 변모시키는 정책과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체제개혁을 통하여 추구한 것은 '社會의 民主化'와 '經濟改革의 확충'이었다. 그 내용은 우선 정치영역에서 일당-프롤레타리아계급독

재를 포기하고 다당제와 다원주의의 도입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과 정부에 의한 시민 통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경제영역에서 고르바초프는 정부통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율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외교정책에서는 냉전적 이데올로기중심으로선 벗어나 모든 국가와의 교류협조를 약속하는 개방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페레스트로이키는 1990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포기선언이라는 단계까지 갔으며, 지난 해 8월 보수주의세력이 주도한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연방이 붕괴를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키는 동구공산국가에 파급되어 1989년 한 해 동안 거의 모든 국가들이 脫共產主義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중국은 1978년 이래 일당지배체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오직 경제체제만을 개혁하여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지난 1989년에는 天安門事件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중국은 개혁으로 경제적 여건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

북한은 여타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지금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켜왔다. 이제 사실상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체제가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은 더 이상 공산주의를 지켜나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아주 나빠졌기 때문이다. 남한에 비해 GNP가 10분의 1 수준으로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지난 해에는 -3.7%의 성장을 기록했다. 따라서 북한이 다른 공산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소련식의 전면적 체제개혁은 불가피하게 현 지배층의 권력 상실을 초래할 것이기에 북한은 결국 中國式 改革을 따라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이제 20세기와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이후 동서 진영간 냉전으로 분단과정을 걸어왔으나, 독일은 1990년 10월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이 이룩한 통일의 의의는 남북분단 46년만에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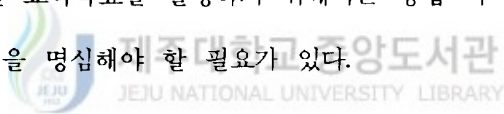
독일통일을 촉진시킨 요인은 크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대내적 요인은 서독 국내정치적 민주화와 안정 그리고 주변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서독정부의 외교역량이었으며, 대외적으로 고르바췌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동구의 대변혁운동이 독일통일을 촉진시켰다.

독일국민들은 통일의 감격은 순간적이고, 통일후의 후유증과 통일비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동서독 통합후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동독지역의 경제침체이다. 통일후 서독지역의 경제는 東獨特需로 인해 크게 활성화된 반면 동독지역에서는 국민총생산의 3분의 1이 감소되었고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통일전에 누렸던 동유럽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일시에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실업, 물가등귀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동독지역의 경제복구와 사회보장을 위한 이른바 통일비용의 조달을 위해 서독지역의 사람들은 세금이 늘었고 동독지역 이주민으로 인한 주택문제, 범죄문제 등으로 사회안정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로써 동서독지역 주민들사이에는 사회심리적 갈등구조가 자리잡는 등 마음의 분단벽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도 통일독일의 현실이다.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작된 북한의 변화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통일의 염원을 갖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통일의 목표를 달라진 통일환경에 맞추어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흐름은 통일이 단순한 국가통합이란 인식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은 국가통합보다는 민족사회의 삶의 마당을 하나로 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우선적 통일보다는 민족구성원의 삶의 무대를 하나로 만드는 민족통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리라 본다. ‘分斷’ 아니면 ‘國家統合’의 양분법적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통일’이라면 민족성원의 삶의 터전의 통합으로 인식되는 ‘민족통일’은 통일노력 전개를 훨씬 편하게 하여준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도 이러한 통일목표의 현실화에 맞추어 내용과 방법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종래의 통일교육이 남북한대결구조에 토대를 두었다면 ‘민족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의 새 방향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가능한 영역에서 부터 만들어 가는 데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기는 통일’보다는 ‘함께 이루는 통일’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이 민족사회 성원 모두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통합된 삶의 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면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을 담아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질서 그리고 공존합의를 통한 통일 등이 ‘민족통일’ 교육의 이념적 틀이 되어야 되리라 본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 역시 과감한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고려대 평화연구소편(1990),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서울: 법문사).
- 고현욱 외(1988),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국토통일원 편(1987), 「김정일명의 담화 논문」, (서울: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85),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대학국민윤리교재용)」, (서울: 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85), 「대학생 종교인 통일문제 의견조사」, (서울: 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84), 「무엇이 공산주의인가(개정판)」, (서울: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69), 「사회과 교육과정실태분석(반공중심 중 고교)」, (서울: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85),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통일교육 교재」, (서울: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85), 「초·중등학교 교재용 통일안보 관련 내용 검토보고서」, (서울: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69), 「통일교육을 위한 공산주의 비판의 새로운 방향」, (서울: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82), 「통일대화」, (서울: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76), 「통일문제」, (서울: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71), 「통일연수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 편(1971), 「통일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방안」, (서울: 국토통일원).
- 김갑철·고성준(1988),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서울: 문우사).
- 김규택(1991), 「사회주의의 장래」, (서울: 일조각).
- 김달중·스칼라피노 편(1989), 「아시아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서울: 법문사).
- 김운태 외(1989), 「한국정치론」 제2정정판, (서울: 박영사).
- 金長壽(1989), 「국민학교 통일, 안보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I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원).
- 김준엽, 스칼라피노 공저(1981), 「북한의 오늘과 내일」, (법문사).
- 김진경(1989), 「전환기의 민족교육」, (서울: 푸른나무).
- 盧在鳳 외(1979), 「통일한국의 미래상 정립에 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 민족통일연구원(1992),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민족통일문제연구소).
- 민족통일연구원(1991),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1-1992」, (민족통일연구원).
- 朴容憲(1978),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통일반공교육의 변천과정 분석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 朴容憲(1972), 「통일교육정책조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서울: 국토통일원).
-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1989),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 서울대학교 사회주의 연구팀(1991),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서울: 형성사).
- 성내운(1985), 「분단시대의 민족교육」, (서울: 학민사).
- 小澤有 외: 교육출판기획실(1990), 「민족문제와 교육」, (서울: 푸른나무).
- 신일철(1987), 「북한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 양성철(1990), 「북한의 정치」, (서울: 박영사).

- 양호민(1987), 「북한사회의 재인식」, (서울: 한울출판사).
- 양성철, 박성조 공저(1991), 「통일독일과 분단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연합통신(1991),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합통신사).
- 유세희, 이정식 편(1991),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윤대원(1990), 「통일 사회를 전망하는 '민족 해방 운동사'에 중점을: 통일을 위한 근
현대사 교육, 역사가 10인에게 듣는다.」, (서울: 역사문제 연구소).
- 李奎浩(1973), 「세계각국의 정치교육현황분석」, (서울: 국토통일원).
- 이근철(1986), 「한 사상과 국민교육」, (서울: 한국철학연구).
- 이상민(1986), 「소련관료정치론」, (서울: 법문사).
- 이상우 외(1989), 「북한 40년」, (서울: 을유문화사).
- 이상우 편(1987), 「통일한국의 모색」, (박영사).
- 李世基(1985), 「통일의 전망과 우리의 자세: 대화시대의 통일논리정립을 위하여」,
(서울: 통일원).
- 이영덕(1971), 「중급용 통일교육과정구성」, (서울: 국토통일원).
- 鄭世九(1985), 「도덕과 국민윤리와 교육의 의의」, (서울: 서울대).
- 鄭世九(1987), 「북한청소년과의 이념논쟁에 대비한 청소년 이념교육 방향 연구」, (서
울: 성곡학술문화재단).
- 조정남(1990), 「사회주의 체제론」, (서울: 교양사).
- 한국교육개발원(1988),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통일교육 방향탐색을 위한 세
미나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스 마레츠키 저, 정경섭 옮김(1991), 「병영국가 북한」, (서울: 동아일보사).
- 한완상(1985), 「한국민중교육론: 그 이념과 실천전략」, (서울: 학민사).

황성모(1975), 「해외 통일홍보 전개방안」, (서울:국토통일원).

이념교육연구위원회편(1985), 「이념교육의 활성화 방안」, (서울:경기대 사회과학연구
구소).

(논문)

김영민(1992),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과제와 방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통
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새 방향」, 제9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金炳五(1985), “영동지역 대학생의 통일의식과 교육개선방안”, 「통일안보논집」 12,
(서울:강릉대통일문제연구소).

金耀燮(1977), “한국통일과 청소년 교육:작품을 통해서 본 청소년들의 통일세계”,
「통일정책」 11, (서울:평화통일연구원).

金仁會(1985), “분단시대의 극복과 한국교육의 방향”, 「사상과 정책」 6, (서울:경
향신문사).

金載勳(1970), “통일의식의 고취방안”, 「통일논총」, (서울:국토통일원).

金正鐸(1987), “전후세대의 대북한관 연구:남북적십자사 회담보도의 영향과 관련하
여”, 「사회과학 27」 9, (서울:성균관대).

金忠南(1983),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과 교육의 자세”, 「통일논총」 6, (서
울:국토통일원).

김호길(1988), “국제화시대의 통일문제와 이념교육”, 「부산외대 국제문제논총」 12,
(서울:부산외대국제문제연구소).

羅錫權(1972), “통일교육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서울대행
정대학원).

- 朴相變(1985), “민족윤리와 이념교육”, 「청주사대 이념연구논집」 3, (서울: 청주사대이념교육연구소).
- 박화서(1989), “도덕 및 국민윤리교과서를 통해본 통일안보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자성”, 「연세대교육과 윤리」 11, (서울: 연세대 국민윤리연구회).
- 박희원(1970), “반공도덕교과의 분석 연구: 중고등학교 반공도덕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교육대학원 논문」 11, (서울: 고려대교육대학원).
- 서진영(1991),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세전망과 한반도”, 한국사회주의체제연구협의회, 「공산권 연구논총」 제3집.
- 孫秉基(1990), “대학생이념 지도와 통일방안: 주체사상비판과 민주주의의 가치”, 「목원대 생활연구」 1, (서울: 목원대 학생생활지도연구소).
- 손정규, 서용석(1984),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통일문제연구」 6, (서울: 목포대 통일문제연구소).
- 宋潤顯(1984), “정치사회화에 입각한 정향과 반공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충남: 공주사대교육대학원).
- 申命淳(1989), “반공이념 교육내용의 개선방안”, 「국방학술논총」 10,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李明宰(1984), “남북한 이데올로기교육의 비교연구”, 「상명여대논문집」 8, (서울: 상명여대).
- 이문조(1985), “대한국민윤리교육에 있어 민주주의교육에 대한 효과측정”, 「사회과학연구」 11, (서울: 영남대사회과학연구소).
- 이상우(1989), “남북한 통일정책의 논리구조 비교”, 서강대동아연구소, 「동아연구」 18집, 1.

- 李星珍(1985), “전후세대의 안보의식 제고문제”, 「국가안전보장논총」 12,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 이영일(1976), “민족정신교육에 있어서의 통일정책의 정립”, 「통일정책」 8,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 李宇榮·韓點洙(1977), “한국통일과 청소년교육: 통일·안보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구성, 청소년의 실태조사·분석을 통해서”, 「통일정책」 11,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 鄭千九(1986), “남북대화 시대의 국민 반공이론”, (서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趙鳳來(1977), “한국통일과 청소년 교육: 통일안보문제에 관한 청소년 지도의 문제점”, 「통일정책」 11,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 趙柱泰(1977), “한국통일과 청소년 교육: 통일안보문제와 정신전력, 통일안보의식의 강화방안”, 「통일정책」 11,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 崔淞凡(1977), “한국통일과 청소년 교육: 중고등학생에 대한 안보교육(실태중심), 통일안보간의 정립을 위한 제언”, 「통일정책」 11,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 崔仁和(1989), “민족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통일교육의 전개방향 모색 3”, 「교육연구」 3, (서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원).
- Ted Tapper(1980), “정치교육의 방법론과 그 체계”, 「통일정책」,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2. 서양문헌

- Arendt, Hannah(1968),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
Harcourt.

- Chirstenson, Reo M. et al., (1981),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3rd ed., New York : Harper & Row Pub.
- Johnson, Charlmers, et al., (1968), 『Changes in Communist system』, Standford : Standford Univ Press.
- Kennedy Paul(1987),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 Random House.
- Light Margot(1988), 『The Soviet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ted Kingdom : The Harvester Press Pub.
- Meissner Borris(1987), “Gorbachev’s Perestroika : Reform or Revolution?”, 『Aussenpolitik』, Vol 38.
- Stavis Benedict(1990), “Contradictions in Communist Reform : China before June 4, 1989”,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05, No.1.
- Harding Harry(1987), 『China’s Second Revolution』, Washington, D. C. : Brookings Institation.
- Woznuik Vladimir(1988), “Gorbachev, Reform and the Breznev Doctrines, 『Comparative Strategy』, Vol.7, No.3.
- Bell, Daniel(1970), “Ideology and Soviet politics”, R.Cornell,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N.J., : Prentice Hall.
- Cotton James(1987), “The Ideology of the Succession in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II, No.6.
- Byung-Chul Koh(1988), “North Korea in 1987”, 『Asian Survey』, Vol. XX VIII, No.1.

- Lowenthal, Richard(1983), "The Post-Revolutionary phase in china and Russi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VI, No. 3.
- Sang-Woo Lee(1989), "From National Unification to state Unification : A Realistic Design for one Korea", presented at the 4th Korea-U.S. Conference on North Korea Seoul, August 8~10, 1989. Cosponsor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st Studies and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Seton-Watson Hugh(1977), 『Nation and Stat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Nye Joseph(1971), 『Peace in Parts』, Boston : Little Brown & Co.
- 『Strategic Survey 1990-1991』(1991), London : IISS.
- Pfaff william(1991), "Redefining World Power", 『Foreing Affairs』, Vol. 70, No. 1.
- Sung-Joo Han(1991), "The Two Koreas after Their UN Admission", 『Korea and World Affairs』, No. 3.

<Summary>

A Study on the Change of Socialism and
the National Unification

— With an emphasis on searching for a new method
of unification educat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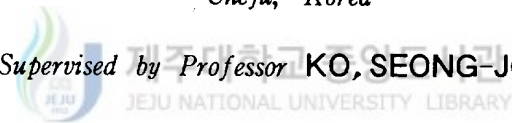
PARK, JUN-CHON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It can be said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trends in the 20th century is an appearance and expansion of communism, but communism has been collapsed since 1989, except North Korea because of its anti-democratic system and economic slowdown.

The Perestroika which has been developed in Soviet Union since 1985 made Soviet Union itself declare the renunciation of socialism in 1990 with its system broken down in 1991. This atmosphere of

innovation spread into the Communist bloc in Eastern Europe and its communist countries have become democratic since 1989. In Red China economic innovation has been gradually carried out. Under the circumstances, North Korea is effecting a reform step by step.

The dramatic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had already made our country have a bright prospect of unification. However, Germany suffering from several problems including the cost of unification has our country readjust the policy of unification. The readjustment of the unification policy brings about improvements of goal, content and method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pursuit of convertible national unification education can be a foundation, seen from the vast influence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recovery of national homogeneity upon the unification of Germany.